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69
----------	------

발의연월일 : 2024. 9. 25.

발 의 자 : 이수진 · 박홍배 · 김정호
송옥주 · 추미애 · 정태호
이기현 · 민형배 · 서영교
송재봉 · 안규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능력개발·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청년 기본소득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촉진을 위하여 청년에게 기본소득 (이하 “청년기본소득”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으로 한다.

③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청년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조의2(청년에 대한 영향평가)</u></p> <p><u>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능력개발·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u></p> <p><u>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u>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 ⑨ (생략)
<신설>

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청년 기본소득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촉진을 위하여 청년에게 기본소득(이하 “청년기본소득”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으로 한다.

③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청년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